

공 개



의안번호	제 7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2. 18. (제 3 차)	

(주)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2. 18.

1. 의결주문

(주)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주)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설명확인의무 위반’,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주)신한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설명의무),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의2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5항,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2항,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2, 제7호, 제9호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3호, 제20조의7(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5항,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2항,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제1항, 제2항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2(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제1항 제3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제1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3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4항,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1호,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7호, 제52조(과태료)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5호
- 「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1항, 제2항
-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제1항,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별표3], [별표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1항,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2항, 제18조(과태료) 제1항 4호 및 제2항 제3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1항,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제21조의3(전자금융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제1항,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제1항,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1항,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2항, 제3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방법 등),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5조의2(행정처분), 제7조(과태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 [별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제재양정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1.26.) 심의필
-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2021.1.6.) 심의필

<별지>

(주)신한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주)신한은행 : 과태료 21억 3,11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확인 의무 위반(8억750만원)
- 나. 추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3억2,000만원)
- 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6,000만원)
- 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3억3,600만원)
- 마.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이용 관련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4,800만원)
- 바.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체결의무 위반 (2,400만원)
- 사.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1억6,800만원)
- 아.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 허위공시 (1억6,800만원)
-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누락(1억5,000만원)
- 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3,600만원)
- 카.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위반 (960만원)
- 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400만원)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1호,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109조 제3항 제1의2호,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9호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제35조의2 제5항, 제52조의2 제2항, 제69조 제1항 제5호의2, 제7호, 제9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호, 제20조의7 제5항, 제31조, [별표4]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2항, 제31조,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제1항, 제2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2 제1항 제3호
 「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3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제34조, [별표2]
 (舊)「신용정보법」 제20조 제4항, 제33조 제1호, 제40조 제7호,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5호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2항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8조 [별표4]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제38조 [별표4]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제21조, [별표3], [별표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18조 제1항 4호 및 제2항 제3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조, [별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21조의3 제1항, 제22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33조, [별표3]

□ 직원에 대한 조치

조치대상자	조치사유	조치안	
		신분제재	금전제재
부부장 ○○○	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견책	금융위원회 통보예정 ^{주1)}
부지점장 ○○○	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견책	
부지점장 ○○○	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주의	

주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금융위원회 통보예정(「금융위원회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중 제29(금융실명제 관련사항)의 “자”목)

- 법적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의2, 제7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조치사유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확인 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47조 및 제71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① △△△△△△△△ 등 4개 영업점은 2017.1.13.~2018.7.6.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주)▲▲▲▲▲▲▲ 등 4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확인을 받지 않았으며(10건, 329만 달러)

- ② ▽▽▽▽▽▽▽ 등 7개 영업점은 2017.1.13.~2018.7.6. 기간 중 일반 투자자인 ▼▼▼▼▼▼▼(주) 등 7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확인을 받지 않았음(29건, 4,995만 달러)

나.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도
- ☆☆☆☆☆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8.3.5.~2019.3.19. 기간 중 부적합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10명과 신탁재산을 주가연계 증권(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16건(10.2억원)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였음*

* 상품 설명내용이 전혀 없는 무음 녹취파일만 존재

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1)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 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주)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4.30. ○○○○○○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에 참여한 후 2018.5.3. ○○○○○○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안 설명회에서 시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1,000 억원으로 제안하고, 2018.5.4.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8.6.19. ○○○○○○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1,000억원 등을 포함 하는 금고 운영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 위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1,000억원) 중 일부*(393.3억원)는 시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됨에도,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1,000억원) 중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등 393.3억원 (필수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259.5억원) 및 유지보수 등 운영 비용(347.2억원)은 시금고 운영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

** ○○○○○○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출연금 등(3,189억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음

<참고1>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관련 재산상 이익제공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주)신한은행이 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항(1,000억원) 중 '19.1월부터 금고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산시스템 구축(~'18.12월, 259.5억원) 및 운영(347.2억원) 이외에

- 차세대 전산시스템 전면 재구축('19.10월~'21.12월) 및 ○○○○○○ 디지털화폐(S페이)* 등 기타 사업(393.3억원)은 통상적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범위를 초과**하며,

* 복지 예산 디지털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편 결제 서비스, 지류 상품권의 디지털화 등

** ○○○○○○가 시금고 입찰 공고시 제시한 과업범위 수행을 위한 필수 시스템 구축(계약기간 시작 시점에 바로 활용되어야 할 사항)외에 계약기간 만료전(약 1년전)까지 구축하기로 한 차세대 시스템 등은 시금고 운영 계약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초과하는 사항임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도 향후 ○○○○○○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서 은행이 거래관계 개설을 위해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

<참고2> 재산상 이익제공의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정상적인 수준'에 대한 판단)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제공의 '정상적인 수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공규모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준을 말하나 (주)신한은행은 아래와 같이 차세대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재산상 이익 제공(393.3억원)과 관련하여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음

1.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것.

→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음

2.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음

3.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용할 것

→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을 거치지 않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운용하지 않음

4.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할 것

→ 제공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음

5.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 공시하지 않음

<참고3> 항목별 재산상 이익제공의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항 목	○○○○○○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금액		재산상 이익제공 해당여부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위한 절차				
				①	②	③	④	⑤
출연금 등	3,189억원		○	○	○ (3,321억원 이내)	○	○	○
전산시스템 구축 등	1,000 억원	차세대 전산 구축비용 등 (393.3억원)	○	X	X	X	X	X
		필수전산 구축비용 (259.5억원)	X	-	-	-	-	-
		유지보수 등 운영비용 (347.2억원)	X	-	-	-	-	-

① 준법감시인에 대한 사전 보고 ② 이사회의 사전 의결 ③ 적정성 점검 등 내부통제기준 운영

④ 연도별 이사회 보고(현황 및 적정성 점검 등) 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2) 사외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주)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4.30. ○○○○○○ 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 참여를 위해 ○○○○○○에 제공할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 출연금 한도 산출시 전산구축 비용이 1,000억원 소요되는데도 이사회 안건에는 전산구축 비용을 650억원만 반영하여 출연금 한도가 약 333억원이 과다 산출되는 등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참고> 신한은행의 출연금 규모 산정 방식

- 은행 내규(‘출연금 결정모형’)에 따르면 출연금은 영업이익에서 총경비를 차감한 예상 세전이익의 95%이내로 지급되어야 함
 - 기관고객부는 ○○○○○○ 금고 선정에 따른 영업이익 4,360억원, 총경비 864억원 (전산구축비 650억원 등)을 적용하여 예상 세전이익(3,496억원)의 95%인 ‘3,321억원 이내’로 출연금 제안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2018.4.30.)함
 - 그러나, 2018.5.3. ○○○○○○ 금고 선정을 위한 제안 사전회의시 ○○○ 前 은행장이 ○○○○○○에 전산구축 비용을 1,000억원+α(인건비)로 제안한 점, 2018.6.19. ○○○○○○와 체결한 금고 업무 약정서(이행계획서)에도 전산구축 비용의 세부항목 총액이 1,000억원으로 되어 있던 점에서 본 건 전산구축 비용은 1,000억원으로 판단
- 전산구축 비용을 1,000억원으로 계산하면 예상 세전이익은 3,146억원이 되고, 출연금 한도는 예상 세전이익의 95%인 2,988억원 이내로 승인되어야 함

※ 실제 ○○○○○○와는 총 3,189억원으로 제안·약정(현금 출연금 3,015억원, 지역사회기여금 174억원)

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 (舊)「신용정보법」 제40조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 식별정보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면 아니 되는데도

○○○○○○○ 등 887개 영업점은 2017.1월~2019.6월 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박○○ 등 8,598명의 개인 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8,598명, 40,301건)에 이용하였음

* (1차) 고객이 개인신용정보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해당 동의서가 없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시스템 상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오류 입력

(2차) BPR센터에서 동의서 스캔 및 동의여부 재확인시 개정된 동의서 양식을 제대로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고객이 개인신용정보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해당 동의서가 없는데도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시스템에 오류 확인됨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신용정보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과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17.1월~2019.6월 기간 중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와 관련하여 실제 고객이 작성한 동의서 내용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고객 동의서 스캔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사후 관리 및 적정성 점검을 소홀히 하여 동의서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장기간 스캔 검증시스템이 오류 작동하게 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여 고객동의가 없었음에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마.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이용 관련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의 직급별·업무별 차등부여 등을 포함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 부여 및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2017.4.30.~2019.11.26. 기간 중 ① ○○○카드(주)로부터 회원 모집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신용카드 관련 신용정보를 위·수탁업무가 아닌 임직원 내부감사 목적으로 장기간 이용(197,822건, 최소 6,525회)되도록 하였으며, ② 임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받아 금융사고 조사 등에 이용(79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바.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체결의무 위반 등

-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서로 동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 (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은 2019.10월 농기계 판매업체 △△△△△(주)와 단체성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사.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은행법」 제35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에게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주)신한은행은 2018.5.3.~2019.9.26. 기간 중 특수관계인 2인에 대한 신용공여 7건*이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금융투자(주) 1건(359억원, '19.9.26.), (주)◎◎은행 6건(총 498억원, '18.5.3.~'19.3.12.)

** 50억원[자기자본의 1만분의 10('19.9월말 기준 292.2억원)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공시 누락현황

(단위 : 억원)

특수관계인	종류	신용공여일	만기	금액
(주)◎◎은행	외화콜론	2018.05.03	2018.05.17	75.2
		2018.05.17	2018.05.31	75.5
		2018.06.19	2018.06.26	55.2
		2018.06.27	2018.07.03	111.5
		2018.07.03	2018.07.11	67.0
		2019.03.12	2019.03.13	113.5
◎◎금융투자(주)	외화대출금	2019.09.26	2020.09.26	359.5(한도) 328.5(잔액)

* 신용공여일 당시 1회차 매매기준율로 환산

아.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 허위공시

-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등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 ‘은행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기타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주)신한은행 여신기획부 등 3개 부서는 은행 내규, 상품설명서 및 신탁 계약서에 따라 담보신탁 등기비용을 은행 또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운영*하면서 2018.12.5. ~ 2019.12.26. 기간 중 대출상품 96개에 대해 담보신탁 등기비용을 은행이 부담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은행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음

* 실제로 2018.12.5. ~ 2019.10.31. 기간 중 부동산 담보신탁을 이용해 담보취득한 218건 중 47건(21.6%)은 고객이 등기비용을 부담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누락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 제5조 및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거래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주)신한은행 소비자지원부는

- ① 2018.1월 ~ 2019.2월 기간 중 이OO 등 342명으로부터 피해구제 신청 (392건)을 받고 3개 계좌에 대해 사기이용 의심계좌로 보아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 ② 2018.9월 ~ 2019.2월 기간 중 지급정지된 2개 계좌의 명의인(1명)으로부터 이의제기를 접수(100건)하고도 이를 해당 피해자 및 금융 감독원에 통지하지 않았음

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 보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제11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은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 (주)신한은행은 데이터 백업 및 보관기간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운영 하면서 중요도에 따른 전산자료의 보존기간을 잘못 설정함에 따라 ◇◇계(□□□□) 서버의 가동기록**이 보존된 로그파일을 가동기록 백업일로부터 1개월간만 보존한*** 사실이 있음

* 내규 「백업관리 운영 절차서」에 일백업은 1주일, 주백업은 1개월, 월백업은 1년 보관으로 정의

** B/S 잔액대사 점검화면(◆◆◆◆◆◆◆◆)에 대한 구동 로그 등

*** 정보처리시스템 저장용량의 제한으로 ◇◇계(□□□□) 가동기록이 포함된 로그를 서버에 7일간만 보관하며 서버에서 삭제 후 백업정책에 따라 백업시점 으로부터 1개월 후 파기

(2)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 (주)신한은행은 2019.11.6. ~ 11.10. 기간 중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스템 테스트 시 실이용자 정보가 보관된 운영서버 DB*에 접속**하여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 통제절차 없이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 IB시스템 DB(○○○○○○○○○○) 내 ◆◆_◆◆◆_◆◆◆ 테이블
- ** 개발서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DB(○○○○○○○○) 및 □□시스템DB(○○○○○○○○○○) 등 운영서버DB에 직접 연결(DB Link)하였고, 이중 □□시스템DB에서 이용자 정보를 조회

(3)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 (주)신한은행은 검사대상 기간(2017.4.29.~2019.11.8.) 중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및 장애대응 등의 목적으로 내부망에 위치한 대용량 저장장치에서 인터넷망에 위치한 동 저장장치 제조·공급사의 모니터링 센터로 시스템 운영상태 및 장애발생 정보를 송신하였고,
- 검사착수일 현재 내부망에 위치한 서버(○○대)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정보처리시스템 관리·통제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 및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고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하여 하는데도

- (주)신한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DMZ 구간에서 운영하는 △△△△ 연계 서버의 로그파일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이용자 정보 ▽▽,▽▽▽건(중복제거)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고,
- 형상관리시스템 DB 內 비밀번호*를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지 않은 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보관하고, ○○○○○○시스템 DB계정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였으며,

* 형상관리시스템 DB의 ○○_○○○○○○○, ○○_■■■■■■■■, ○○_◆◆◆◆◆◆, ○○_▣▣▣▣▣▣▣▣ 등 4개 컬럼에 저장된 비밀번호

** DMZ 구간의 △△△△ 연계 서버 로그파일에 평문으로 저장

□□계(■■■■■■) 시스템 등 주요 DB접속을 위한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개 중 ○○○개(87.8%)를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주요DB계정 비밀번호 최종 변경년도 : 2013년(○개), 2016년(○○개), 2017년(○○개) 등

(5) 전산원장 변경 관리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 (주)신한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본부부서 및 영업점 등의 데이터 수정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업무처리시스템(통합단말) 내 전산원장 변경이 가능한 ◎개 화면을 구현·운용하면서

동 화면을 통한 전산원장 변경시 변경 내용의 정당성을 제3자가 확인 하는 업무·통제 절차를 마련·운용하지 않아

검사대상 기간(2017.4.29.~2019.11.8.) 중 ◎◎명의 직원(은행 직원 ◎◎명, 외주 인력 ◎명)이 동 화면을 통해 총 ◎,◎◎◎회에 걸쳐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을 수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 동 화면에서의 변경 전·후 자동기록은 데이터웨어하우스(DW)에 저장된 거래 기록임

- ◇◇◇관리 업무의 경우 외주 인력(◎명)에게 동 화면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 검사대상 기간 중 총 ◎◎◎회에 걸쳐 전산원장을 변경토록 운용한 사실이 있음

(6) IT추진사업 계약관리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4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계약금액, 구축완료일자, 납품방법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계약조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주)신한은행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시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검수, 대가의 지급, 납품지연 시 의무 등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하고도,

* 「계약업무규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4조(대가의 지급 및 수입) 「계약업무지침」 제76조(감독 및 검사), 제78조(대가의 지급) 제85조(지체상금)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고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 검사대상 기간(2017.4.29.~2019.11.8.) 중 추진한 일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건)에 대해 ‘기능·만족도 상이’ 및 ‘이행의 안정성 확보’ 등 은행 내부 사정을 이유로 검수 및 대가의 지급 일정을 유예하는 등 계약서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일 보다 구축 완료가 수개월 지연되거나, 은행이 검수기한을 초과하는 등 검수를 지연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대금지급을 유예

- 이 중 ◎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계약서상 마련된 지체보상제도에 따라 납품 지연 시 부과하여야 할 지체보상금을 임의로* 부과하지 않는 등 검사부서 승인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있음

* ‘전략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검사부서의 승인 없이 소요부서인 리스크공학부에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지체보상금 부과에 대한 면제품의를 실시

카.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하고, 평가시에는 기술적 보안 부문 중 데이터베이스 보안항목에 대하여도 분석·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 (주)신한은행은 검사대상 기간 중 실시한 2018년 및 2019년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2 별표3의 항목 중 데이터베이스 보안 항목에 대한 점검을 누락하였으며,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가 취약하게 운영되도록 방치한 사실이 있음

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 (주)신한은행은 전자금융거래 등을 처리하는 〇〇계(〇〇〇〇)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동 시스템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기록,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는 로그 데이터**에 대하여

* 전자금융, 유동성, 가상계좌, 수수료 거래기록 등을 포함

** 거래금액, 잔액,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 등이 포함된 계정정보 데이터 및 채널유형, 거래일자, 고객번호, 실명번호, 고객명, 기산일자 등 부가 정보 데이터 등

장기보관 백업 데이터의 보존기한을 축소*(5년→1년)함에 따라, 2000.00.00.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〇〇계(〇〇〇〇) 거래시 발생 되는 로그 데이터를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00.0월까지는 장기 보관 데이터로 지정하여 매일 백업후 백업파일의 보존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백업관리 운영 절차서」 개정(2000.0.0.)에 따라, 백업 데이터의 보관 주기 및 소산 정책을 상세화하는 과정에서 백업파일의 보존 기한을 축소

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주)신한은행 ★★★★★ ★★★★★ 등 3인은 2017.7.4.~2019.11.20. 기간 중 000 등 2명 명의로 신규계좌 18건(특정금전신탁 11건, 펀드 7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 내방하였음에도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확인 없이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고 명의인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전산 처리 하여, 계좌를 개설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내역

번호	고객명	신규일자	상품구분	거래금액(원)	영업점명	행위자
1	000	2017-07-04	신탁(ELS)	xxx,xxx,000	◆◆◆	000
2	000	2017-09-06	신탁(ELS)	xxx,xxx,000	◆◆◆	000
3	000	2017-09-25	신탁(ELS)	xxx,xxx,000	◆◆◆	000
4	000	2017-11-06	신탁(ELS)	xxx,xxx,000	◆◆◆	000
5	000	2018-01-10	펀드(공모)	xxx,xxx,000	◆◆◆	000
6	000	2018-03-13	신탁(ELS)	xxx,xxx,000	◆◆◆	000
7	000	2018-07-11	신탁(ELS)	xxx,xxx,000	◆◆◆	000
8	000	2018-07-18	신탁(ELS)	xxx,xxx,000	◆◆◆	000
9	000	2019-03-29	펀드(사모)	xxx,xxx,000	◆◆◆	000
10	000	2019-11-13	신탁(펀드)	xxx,xxx,000	◆◆◆	000
11	000	2018-03-20	펀드(사모)	xxx,xxx,000	●●●●●●●●●●	000
12	000	2017-10-17	펀드(사모)	xxx,xxx,000	○○○○○○○○○○	000
13	000	2018-01-04	펀드(사모)	xxx,xxx,000	○○○○○○○○○○	000
14	000	2018-10-10	펀드(사모)	xxx,xxx,000	○○○○○○○○○○	000
15	000	2019-02-07	신탁(ELS)	xxx,xxx,000	○○○○○○○○○○	000
16	000	2019-08-19	신탁(펀드)	xxx,xxx,000	○○○○○○○○○○	000
17	000	2019-11-20	신탁(ELS)	xxx,xxx,000	○○○○○○○○○○	000
합 계				x,xxx,xxx,000		

관계 법규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3.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④ (생 략)

⑤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⑧ (생 략)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①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4. (생 략)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생 략)

7.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7의2.~8. (생 략)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11. (생 략)

②~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7. (생략)

8.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9. (생략)

② (생략)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법 제34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5. (생략)

제20조의7(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35조의2제4항 전단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⑧ (생략)

제24조의5(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은행은 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리, 계약 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할 것

2.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영업행위 및 은행이용자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카. 은행이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2	3,000
너. 법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 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	6,000
처.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9호	3,000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영 제20조의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공규모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준을 말한다.

1.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 식사 또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조화, 화환을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것.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2.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다만,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 통제기준을 운용할 것
4.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종전 공시된 재산상 이익에서 추가 10억원이 제공된 경우를 포함한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제89조(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① 영 제24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 3.~7. (생략)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행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생략)
3. 기타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③~⑧ (생략)

⑨ 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시할 내용 및 방법,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할 자료의 형식,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4(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이익의 공시) ①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공일자
2. 제공받은 자(실명이 아닌 업종으로 공시하고, 그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름)
3. 제공목적
4.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제공한 이익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한 업무의 계약 기간 중 제공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을 말함)

② 제1항제4호의 경제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편익 등의 경우 해당 편익 등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③ 규정 제29조제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최초 공시 이후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 중 추가로 제공한 이익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생략)
3. 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

4.~11. (생략)

②~③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생략)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생략)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1.~4. (생략)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6. (생략)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8. (생략)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6. (생략)

②~③ (생략)

제286조(업무)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라. (생 략)

4.~11. (생 략)

② (생 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0. (생 략)

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2.~28. (생 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49.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 방법)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결합증권

2.~5. (생 략)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2. 해당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

3. 해당 파생상품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③ (생 략)

제53조(설명의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5. (생략)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④ (생략)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2. (생략)
-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5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호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녹취대상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 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나. 70세 이상인 사람
- 3.~13. (생략)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② (생략)

③ 법 제108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략)
- 1의2.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와 신탁계약(신탁재산을 녹취대상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 2.~10. (생략)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8. (생략)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생략)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1)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10.~14. (생략)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나. (생략)
다.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10. (생략)

③~④ (생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회사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외이사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제공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버. 법 제18조(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 제3호	3,00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4. (생략)

②~④ (생략)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8. (생략)
 - ③ (생략)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생략)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4. (생략)
4.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5.~7.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 (생략)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바.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권 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4호	1,000
사. 금융회사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3호	500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제15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7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 (생 략)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5조(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를 적용한다.

③~⑤ (생 략)

⑥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생 략)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①~③ (생 략)
-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5. (생략)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⑪ (생략)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4. (생략)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8.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4. (생략)

15. 제40조제7호를 위반한 자

③~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⑥ (생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 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협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 관리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대통령령 제 30893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생략)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함.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⑤ (생략)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⑦~⑭ (생략)

제34조의3(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 법 제40조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나 방식을 말한다.

1. 전화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8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파.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4,000
하.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4,000
쿠. 법 제40조제7호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5호	2,40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舊)「신용정보업감독규정」(2020.8.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35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II.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III. 관리적 보안대책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정보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신용정보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표 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제21조 관련)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 마. 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 사항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오류의 정정 등)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 보존 방법, 파기절차·방법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 4.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7.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 12.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방법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하고 3년으로 한다.

③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금융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⑤~⑥ (생략)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0
카. 법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2항제4호	1,200
거. 법 제22조제1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3항제7호	1,000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할 것
9. (생략)
10.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다만, 법인인 이용자 정보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테스트 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11.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은 1년 이상 보존할 것

12. ~ 14.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제11호의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1.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2.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 ⑥ (생략)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할 것(다만, 거래 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계약금액, 구축완료일자, 납품방법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운용할 것

5. ~ 7. (생략)

8.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계약조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을 것

9. (생략)

제27조(전산원장 통제)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는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지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접근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2. 비밀번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 나.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 다.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
3.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 할 것

제37조의2(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내용 등) ①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의 경우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이외의 자의 경우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되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 ⑥ (생략)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부주문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

2. ~ 14. (생략)

② ~ ⑤ (생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직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나. (생략)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생략)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단서 생략)
- 2.~5. (생략)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를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생략)

2.~5.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0만원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전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④ (생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마. (생략)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③ (생략)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3>

금융업종별 ·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 공통부문

I -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 조치 포함) 가능)

5. 가중 및 감경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나.~마. (생략)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29. 금융실명제 관련사항
자.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

< 붙임 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2.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21억 3,110만원 부과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견책 3명 주의 3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가) 재산상 이익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 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고객부는 2018.4.30. ○○○○○○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에 참여한 후 2018.5.3. ○○○○○○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안 설명회에서 시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비용을 1,000억원으로 제안하고, 2018.5.4.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8.6.19. ○○○○○○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1,000억원 등을 포함하는 금고 운영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 위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1,000억원) 중 일부*(393.3억원)는 시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이익에 해당됨에도,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전산시스템 구축비용(1,000억원) 중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등 393.3억원(필수 전산시스템 구축비용(259.5억원) 및 유지보수 등 운영비용(347.2억원)은 시금고 운영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

(나) 사외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18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기관고객부는 2018.4.30. ○○○○○○ 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 참여를 위해 ○○○○○○에 제공할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 출연금 한도 산출시 전산구축 비용이 1,000억원 소요되는데도 이사회 안건에는 전산구축 비용을 650억원만 반영하여 출연금 한도가 약 333억원이 과다 산출되는 등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호
3.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4. 「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
5.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3조 및 제40조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면 아니되는데도

- ① ☆☆☆☆☆ 등 25개 영업점은 2017.1월~2019.6월 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이○○ 등 23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 우편(DM)을 발송(232명, 468건)함으로써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으며,
- ② ○○○○○○○ 등 887개 영업점은 2017.1월~2019.6월 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박○○ 등 8,59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8,598명, 40,301건)에 이용하였음

(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신용정보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과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17.1월~2019.6월 기간 중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와 관련하여 실제 고객이 작성한 동의서 내용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고객 동의서 스캔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사후 관리 및 적정성 점검을 소홀히 하여 동의서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장기간 스캔 검증시스템이 오류 작동하게 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여 (2)(가)와 같이 고객동의가 없었음에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20조, 제33조, 제40조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3)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 이용

(가)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용도의 이용

- (舊)「신용정보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 받은 자(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신한은행이 ◇◇카드(주)로부터 신용카드회원 모집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제공목적에 직접 해당되는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데도

* 신한은행과 ◇◇카드간 카드회원 모집업무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

준법감시부, 감사부 및 인사부는 2017.4.30.~2019.11.26. 기간 중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카드(주)로부터 매월 제공받아 은행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중인 신한은행 임직원의 신용카드 관련 개인신용정보*를 감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내부감사 목적으로 총 197,822건(최소 6,525회) 부당하게 이용하였음

* 신용카드 이용액, 현금서비스 이용액, 신용카드 연체액 등

(나) 임직원 가족의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 (舊)「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감사부는 임직원의 금융사고 조사 및 예방 명목으로 임의보관 중인 전체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신한은행 고객번호를 단말기(고객정보종합조회)에 입력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2017.5.4.~2019.9.16. 기간 중 ○○○ 등 임직원 가족 67명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79건을 부당하게 제공받아 금융사고 조사 등에 이용하였음

* 대출정보, 연체정보 등

(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의 직급별·업무별 차등부여 등을 포함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부여 및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위 (가)와 같이 ◇◇카드(주)로부터 수령한 임직원의 신용카드 관련 신용정보가 위·수탁업무가 아닌 내부감사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되도록 하였으며, 위 (나)와 같이 임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받아 금융사고 조사 등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1.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舊)「신용정보법」 제17조 제6항, 제20조 제4항, 제32조 제2항, 제33조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4)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가)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 (舊)「신용정보법」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도

- ① ◆◆◆◆◆ 등 29개 영업점은 2019.1.31.~2019.10.31. 기간 중 38명의 고객에게 □□저축은행 등 계열사의 상품(대출, 펀드 등)을 소개 영업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계열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으며,

*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고객이 원할 경우 은행은 계열사(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고객을 소개(개인신용정보 제공)하고 소개받은 해당 계열사의 담당자가 고객에게 구체적인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업무 진행

** 개인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 ② ■■■지점은 2016.3.12.~2019.12.6. 기간 중 농기계 판매업체 △△△△△(주)와의 약정에 따라 동 업체의 연대보증 하에 단체성대출*(205건)을 취급하면서 최초 대출시 차주(184명)로부터 내용이 부실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차주의 개인식별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주)에 제공하였음

* 고객은 은행의 대출금으로 판매업체(△△△△△(주))의 농기계를 구매하며, 판매업체는 고객의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고객이 1개월 이상 연체시 대위변제 의무 부담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이 기재되지 않고,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음

(4) 신용정보 제공계약 체결 시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 누락

- 「신용정보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위 단체성대출(가)-②와 동일)과 관련하여 농기계 판매업체 △△△△△(주)와 2019.10월 단체성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항, (舊)「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2.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1조, 별표4

(5)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하여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25개 영업점은 2017.1.2.~2018.12.31.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 ▽▽(주) 등 251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 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으며(405건),

▼▼▼▼▼▼▼▼▼▼ 등 26개 영업점은 2017.1.2.~2018.12.31.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주) ☆☆☆☆☆ 등 31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외환파생상품을 거래 (171건, 1억 7,137만달러)를 하였음

* 통상 국내은행은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대상과 관련한 개별 근거자료를 대신하여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제출받아 연간 거래한도를 설정·운영

(ㄴ)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금융센터 및 ○○○○○금융센터에서는 2017.1.18. ~ 2018.12.4.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2명의 직원이 ●●●●(주) 및 ○○○○(주)에게 외환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였음(60건, 1,599만 달러)

(ㄷ)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적합성 원칙 위반

- 「자본시장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등 18개 영업점은 2017.1.17.~2018.12.27.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주) 등 22개 기업에 외환파생상품 계약을 투자권유하면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지 않았음(366건, 4억 5,581만 달러)

(ㄹ)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적정성 원칙 위반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등 5개 영업점은 2017.1.12.~2018.9.11.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주)■ ■ ■ ■ ■ 등 5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동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따른 투자자등급에 비추어 해당 외환파생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않았음(10건, 4,548만 달러)

(ㄹ)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확인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47조 및 제71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① △△△△△△△△ 등 4개 영업점은 2017.1.13.~2018.7.6.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주)▲▲▲▲▲▲ 등 4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확인을 받지 않았으며(10건, 329만 달러)
- ② ▽▽▽▽▽▽▽ 등 7개 영업점은 2017.1.13.~2018.7.6.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주) 등 7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확인을 받지 않았음(39건, 5,324만 달러)

< 관련법규 >

- 1.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71조, 제166조의2
-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68조, 제186조의2
- 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9호

(6)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은행법」 제35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2018.5.3.~2019.9.26. 기간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7건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 1. 「은행법」 제35조의2 제5항
- 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 3.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 제3항 및 제4항
-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6조의2

(7)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 허위공시

-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부대비용 등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은행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기타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여신기획부 등 3개 부서는 은행 내규, 상품설명서 및 신탁계약서에 따라 담보신탁 등기비용을 은행 또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도, 2018.12.5. ~ 2019.12.26. 기간 중 대출상품 96개에 대해 담보신탁 등기비용을 은행이 부담한다고 공시하는 등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음

* 실제로 2018.12.5. ~ 2019.10.31. 기간 중 부동산 담보신탁을 이용해 담보취득 한 218건 중 47건 (21.6%)은 고객이 등기비용을 고객이 부담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제2항
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2항
3.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2 제1항

(8)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업무 부적정

- 「은행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별표3-2> 등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아래 ①~③과 같이 해외점포에 대한 시장리스크 및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을 2조 630억원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 산출시 자본공제 항목을 일부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97억원 과다 계상함으로써 BIS비율을 0.2%p(16.16% → 16.36%) 과다 산출하였음

- ① 은행은 BIS비율 산출시 은행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시장리스크 중 외환리스크 산출시 '통화별 외환포지션'은 본점 및 해외점포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외국통화에 대한 외화순포지션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리스크공학부는 2019.6월말 현재 각 해외점포(현지법인 11개, 해외지점 9개)의 외화순포지션 계산시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를 기준으로 외국통화에 대한 외화순포지션을 산출하여 본점의 해외점포에 대한 출자금(갑기금 포함) 포지션과 합산함에 따라 외환포지션 및 위험가중자산을 각각 11,858억원 및 20,838억원 과소 산출하였고

* (사례) 베트남현지법인의 외환포지션 산출시 현지통화(VND)에 대한 순오픈 포지션(순매입 또는 순매도포지션)을 미반영. 다만, 본점에서는 베트남현지법인과 관련하여 B/S상 출자금(원가법에 의한 장부가액)을 고정적으로 인식

- ② 은행은 BIS비율 산출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에 따라 익스포저 및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고, 동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예상 시가평가손실(CVA)등을 감안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리스크총괄부는 매입·매도 통화옵션으로 구성된 조기상환 합성통화옵션(TRF)*을 옵션매도거래**로 취급하여 익스포저를 산출하지 않음으로써 2019.6월말 현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9,677백만원 과소 산출하였으며

* 2019.6월말 현재 통화옵션 거래 617건(계약금액 2.6조원) 중 590건(95.6%)에 해당

** 단순한 옵션매도 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이 없어 익스포저 산출시 제외

- ③ 은행은 BIS비율 산출 시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리스크총괄부는 2018.3월 신한 베트남 현지법인에 신규로 인식된 신용카드 관련 무형자산 계정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지 않아 2019.6월말 현재 자기자본 및 총 위험가중자산*을 각각 9,648백만원 및 24,121백만원 과다 산출하였음

* 소요자기자본 하한(Capital Floor) 산출식에 따라 자기자본공제 항목 변동시 위험가중자산 수치도 변동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3.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4.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7조 <별표 3>, <별표 3-2>

(9) 추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이 녹취대상 상품**에 운용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

☆☆☆☆☆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8.3.5.~2019.3.19.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추가연계증권(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16건(10.2억원)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였음*

* 상품 설명내용이 전혀 없는 무음 녹취파일만 최대 23초 이내로 존재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누락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 제5조 및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① 2018.1월 ~ 2019.2월 기간 중 이OO 등 342명으로부터 피해구제 신청(392건)을 받고 3개 계좌에 대해 사기이용 의심계좌로 보아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 ② 2018.9월 ~ 2019.2월 기간 중 지급정지된 2개 계좌의 명의인(1명)으로부터 이의제기를 접수(100건)하고도 이를 해당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7조

(1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7.7.4.~2019.11.20. 기간 중 ○○○ 등 2명 명의로 신규계좌 18건(특정금전신탁 11건, 펀드 7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 내방하였음에도 명의인 본인이 내방한 것처럼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여 계좌를 개설하였음*

*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없이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고 명의인 본인이 내방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전산 처리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법」 제3조
2.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1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등

(가)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 보존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제11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은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데이터 백업 및 보관기간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중요도에 따른 전산 자료의 보존기간을 잘못 설정함에 따라 ◇◇계(□□□□) 서버의 가동기록이 보존된 로그파일을 가동기록 백업일로부터 1개월간만 보존한 사실이 있음

(나)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9.11.6. ~ 11.10. 기간 중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스템 테스트 시 실이용자 정보가 보관된 운영서버 DB에 접속*하여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 통제절차 없이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개발서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운영서버DB에 직접 연결(DB Link)하여 이용자 정보를 조회

(다)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검사대상 기간 중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및 장애대응 등의 목적으로 내부망에 위치한 대용량 저장장치에서 인터넷망에 위치한 동 저장장치 제조·공급사의 모니터링 센터로 시스템 운영상태 및 장애발생 정보를 송신하였고,

검사착수일 현재 내부망에 위치한 서버(○○○대)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통제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이상으로 설정 및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고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하여 하는데도

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DMZ 구간에서 운영하는 △△△△ 연계 서버의 로그파일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이용자 정보 ▽▽,▽▽▽건(중복제거)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고,

형상관리시스템 DB 內 비밀번호를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지 않은 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보관하고, ○○○○○○시스템 DB계정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였으며,

□□계(■■■■■) 시스템 등 주요 DB접속을 위한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개 중 ○○○개(87.8%)를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㉕) 전산원장 변경 관리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영 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본부부서 및 영업점 등의 데이터 수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업무처리시스템(통합단말) 내 전산원장 변경이 가능한 ○개 화면을 구현·운용하면서

동 화면을 통한 전산원장 변경시 변경 내용의 정당성을 제3자가 확인하는 업무통제 절차를 마련·운용하지 않아

검사대상 기간 중 ○○명의 직원(은행 직원 ○○명, 외주 인력 ○명)이 동 화면을 통해 총 ○,○○○회에 걸쳐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 업무의 경우 외주 인력(○명)에게 동 화면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검사대상기간 중 총 ○○○회에 걸쳐 전산원장을 변경토록 운용한 사실이 있음

(해) IT추진사업 계약관리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4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계약금액, 구축완료일자, 납품방법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계약조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은행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시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검수, 대가의 지급, 납품 지연 시 의무 등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하고도,

검사대상 기간 중 추진한 일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건)에 대해 ‘기능·만족도 상이’ 및 ‘이행의 안정성 확보’ 등 은행 내부 사정을 이유로 검수 및 대가의 지급 일정을 유예하는 등 계약서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 중 ○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계약서상 마련된 지체보상제도에 따라 납품 지연 시 부과하여야 할 지체보상금을 임의로 부과하지 않는 등 검사부서 승인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40조 제1항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60조 제1항

(1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에 의하여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하고, 평가시에는 기술적 보안 부문 중 데이터베이스 보안항목에 대하여도 분석·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검사대상 기간 중 실시한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점검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별표3의 항목중 데이터베이스 보안 항목에 대한 점검을 누락 하였으며,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가 취약하게 운영되도록 방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제1항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제3항
3.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2

(14)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 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등을 처리하는 ○○계(○○○○)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동 시스템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는 로그 데이터에 대하여

장기보관 백업 데이터의 보존기한을 축소함에 따라, 2000.00.00.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계(○○○○) 거래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를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 위반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함)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등 10개 영업점에서는 2019.9.25. ~ 2019.11.8. 기간 중 판매금액이 제한된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기간 개시 전에 고객에게 투자권유하고 상품가입 신청서를 작성(신규금액 38억원, 47개 계좌)하게 하면서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지 않았음

* 고객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만 하고 이후 판매직원이 고객의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을 작성 하였으며, 동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2) 투기지역 소재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제한 위반 등

- 「은행법」 제34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의 유용을 방지해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는데도

○○○○○○○ 등 2개 지점에서는 2019.2.20.~2019.4.15. 기간 중 (주)◇◇◇◇◇ 등 2개 차주에 대해 당초 용도와는 무관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2건, 13억 3,500만원)하였음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34조 제2항
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3.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1항, 제78조 제1항, <별표6>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금융데이터정책과 전자금융과	일반은행검사국 IT·핀테크전략국
연 락 처	02-2100-2676 02-2100-2833 02-2100-2653 02-2100-2663 02-2100-2697 02-2100-2811	02-3145-7062 02-3145-7334